

잠행 끝난 ‘지역통’ 전재수, ‘3선 도전’ 박형준 독주 막을까

지방선거 돋보기

⑥ 보수 우군 ‘영남’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출마 움직임
박형준 부산시장 3연임 도전 유력
전·현 지사 김경수·박완수 신경전

영남은 TK(대구·경북)만큼은 아니지만,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곳이다. 다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분열을 거듭하고 있고 외연 확장의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운영 지지도를 등에 업고 이번 선거를 영남의 지방 권력을 가질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안심하긴 이르다. 영남은 매 선거마다 막판에 보수가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예측할 수 없는 백중세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민주당 부·울·경 전성시대 재현할까

더불어민주당은 8년 전인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를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2020년 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부산 북구 만덕나눔관에서 열린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개통식에 참석, 축하 퍼포먼스를 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무대를 내려오고 있다.

거둔 부산시장이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2021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량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연임을 하고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면서 영남의 권력은 국민의힘 품으로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에 치러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마친 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첫번째 전국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영남특위)를 출범시키며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국민의힘도 영남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직 프리미엄에 더해 지역 공약 개발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 지역통 전재수 출마로 ‘흔들’?

부산시장 선거는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이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전 전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과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지

역 정치인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해수부장관 직에서 물러나고 잠행을 이어왔으나, 지난 9일 부산 북구에서 열린 대심도(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개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3연임 도전이 유력하다. 박 시장 외에도 6선의 조정태 의원(사하구을), 4선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 4선의 이현승 의원(진구을)이 마하평에 오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산 시장

출마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부산이 고향인 조 대표가 후보로 출마해 민주 진영의 표를 분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전직 지사 VS 현직 지사 대결 펼쳐지나

경남지사 자리를 놓고는 전직 경남지사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현직 지사인 박완수 경남지사의 대결 여부도 관심사다. 두 사람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두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박 지사가 올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오는 2028년에 경남·부산통합자치단체장 선출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김경수 위원장은 “자칫하면 2년이 아닌 20년 이상 뒤쳐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울산시장 선거는 현직인 김두겸 시장에 맞서기 위해 민주 진영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예비후보도 이미 등록했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 차출론도 나온다. 이외에도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합당 무산’에 정청래 리더십 타격… 지방선거 이후 논의

與, 비공개 최고위 후 합당 중단키로
조국혁신당, 통합 준비위 제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끝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11일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전날(10일)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정청래 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일부 최고위원의 공개 반발, 정 대표의 전당원 투표 제안, 합당 실무 문서 유출 등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정 대표는 11일 비공개 최고위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왔다”며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잡음을 두고 조국혁신당에 사과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통합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찬성도 애당심이 고 반대도 애당심”이라며 “당 주인인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로써, 정 대표가 추진한 당원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표결로 의결됐지만,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며 정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설득하기 위해 선수별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

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 내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도가 민주당의 간판을 이재명 대통령에서 정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조국혁신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준비위 구성에 동의하고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를 개최해 결정을 추진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선거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늘 회동서 국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선 의제 제한 없이 국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청했던 데 대해서는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사실상 ‘독대’는 없을 것임을 애둘러 밝혔다. 강 실장은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고성국·배현진… 국힘, 계속되는 징계 갈등

“윤리위, 반대파 제거로 쓰여” 지적도

당내 인사들이 민심과 이반되는 해당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윤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반대파 제거’를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날(10일)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씨가 최근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비당권과 인사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는 게 징계 사유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내란죄로 처벌 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고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윤리위원회(중앙당 산하)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에 고씨의 징계 처분은 중앙윤리위나 최고위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는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님이 배 의원을 제소하며 개시됐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반대가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며 배 의원을 제소했다.

배 의원은 이날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 깔고 깔려온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